

#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2 2022.2.1~2.28

\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## 정책건의

- 전국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5단체 공동 입장 발표 (2.16)
  -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되어 산업 전반의 유통·물류 차질이 우려되며,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및 국민 생활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 촉구

## 정책동향
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8,410억 지원 (2.3)
  - 소재·부품 해외의존도 완화,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'22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8,410억원\*(전년 대비 22% 증가) 지원
  - \* (패키지형) 소재-부품-모듈-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(7,358억원 지원)  
(이종기술융합형) 업종 연계 및 단기사업을 위해 도전적 융·복합 소재부품을 개발(1,052억원 지원)
- [산업통상자원부]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「수소법」 안전분야 시행 (2.3)
  -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▲수소제조설비(수전해설비, 수소추출비) ▲이동형 연료전지(지게차용, 드론용) ▲고정형 연료전지(직접수소용) 제조허가·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실시
- [산업통상자원부]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·중견 대응지원 사업 개시 (2.7)
  - 중소·중견기업 탄소중립 전환 이행을 위해 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 분야(316억원), ②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(27억원), ③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(1,500억원) 총 1,843억원 지원 추진
- [고용노동부]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“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” 발표 (2.7)
  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(50인 이상) 중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며,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내실화를 위해 본사·원청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대상 및 방식 개편

- **[산업통상자원부] 중소·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강화 (2.8)**
  - 「산업단지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」을 통해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원할 장비 구축,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('22.4월~'24.12월)
- **[환경부]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, 화관법 적용 유예 (2.13)**
  - 소포장 완제품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을 보관·판매하는 마트, 약국,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\* 적용 유예
    - \* ① 보관·저장시설 및 진열·보관장소, ② 운반차량, ③ 용기·포장, ④ 취급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
- **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산 (2.15)**
  - 안전·국방·행정·제조 등 각 분야\*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·가공부터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·실증까지 쉼 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사업 확대 추진
    - \* ▲안전·국방 ▲행정 ▲제조 ▲기타 등 4대 분야 총 13개 사업·과제에 716억원 지원 예정
- **[산업통상자원부]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 2,513억원 투입 (2.15)**
  - 17개 부·처·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('21~'25년)에 따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2,513억원(전년대비 2.1% 증가) 투입하여, 4대분야 12대 중점과제\* 추진
    - \* ▲세계시장 선점(디지털기술, 국가유망기술, 저탄소기술) ▲기업혁신 지원(맞춤형 시험·인증 서비스확대, 국내외 기술규제애로 해소, 新 측정표준 개발·보급) ▲국민행복(생활밀착 서비스, 사회안전 서비스, 공공·민간데이터) ▲혁신주도형 표준체계(R&D-표준-특허 연계체계 확보, 개방형 국가 표준체계 확립,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 구축)
- **[환경부]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,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(2.18)**
  -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대체하여 환경성\*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(가이드라인) 개발
    - \* 환경성(E)은 기업 경영활동 쉼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대비 자원, 에너지소비,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
  -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내기업 82,432개사의 환경정보를 분석·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, 통계정보,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 공개하고, 기업 자가진단을 통해 위험분야 파악 및 대응책 마련 지원
- **[산업통상자원부] 기업에 이전된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(2.24)**
  - 공공연구기관(출연연구기관·전문생산기술연구소·대학 등)이 보유한 공공R&D 성과물을 중소·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
  - 기업에 이전된 공공기술 유형(시장견인형/기술주도형)에 따라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은 기술을 선별, 사전기획 및 사업화 R&D에 총 100억원 지원 예정

- [산업통상자원부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(2.3)
  -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간·비용 발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
- [환경부]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신설 (2.3)
  - 태양광 패널을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인 전기·전자제품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\*하고,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(1kg당 727원), 회수단위비용(1kg당 94원)을 부과
    - \* 재활용의무량 = 총 재활용의무량 x (의무자별출고량/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)
    - 회수의무량 = 총 재활용의무량 x 반영계수(0~0.5) x (의무자별매입량/전체 의무자의 총 매입량)
  -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장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감면대상에 포함
- 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「상생협력법」 시행 (2.8)
  - 중소기업 기술탈취 침해 예방을 위해 ▲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▲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▲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.18(금)부터 시행
  - 비밀유지계약 체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되었으며,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 조정
- [기획재정부]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·시행 (2.15)
  -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라 3대분야 24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, 신규기술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기술 중심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범위 확대
- [공정거래위원회]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 (2.15)
  - '22.2.18(금)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
    - \* (주요내용)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기술자료의 사용기간,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,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,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,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, 기술자료의 반환·폐기방법 및 일자 등
- [공정거래위원회]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(2.16)
  -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 수행단체의 기준을 ▲시설 ▲인력 ▲교육시설 또는 전문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하였으며,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,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공정위의 이행강제금 부과
- [공정거래위원회] 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(2.17)
  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,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 시행(2.18(금))

## 2 국회

- 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 의원, 2.8)
  -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,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(단, 안전·보건상의 유해, 위험의 정도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 고려)
- 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 의원, 2.8)
  -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하고,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
- 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정태호 의원, 2.10)
  - 최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
- 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 의원, 2.10)
  -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(HFCs)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, 부담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상한액 정비
- 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 의원, 2.11)
  -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동시에 보호구 지급시 노동자의 성별,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의무 규정
  -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- 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 의원, 2.11)
  -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, 1년 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
- 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2.14)
  -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, 미공개중요정보 인지 전 주권상장법인 내부자(법인, 임원 등)는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
- 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 의원, 2.22)
  -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 수립·시행 및 보고서의 신고·공시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, 컨설팅 실시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
- ●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국 의원, 2.23)
  -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